

다산포럼

규제 개혁, 성과를 내려면

유 철 규
성공회대 교수

관료와 공무원 개혁이 서민들의 귀에도 속 들어오는 국정과제로 떠올랐다.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경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30대 그룹 등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위주로 참석자를 구성한 것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물론 토론회 한번 했다고 개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된다고 해도 어떤 개혁일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장 토론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고, 그런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 정권 때보다 커졌다. 토론회가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로 실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짚어 볼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내야 할 암덩이', '쳐부숴야 할 원수', '쇠의'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를 경제혁신과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지적했지만, 술하게 반복하는 범인 가운데에도 어떤 규제를 왜 철폐해야 하고 철폐하면 왜 일자리가 생겨나고, 어떻게 자영업자의 협력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 규제개혁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법이다. 또 대통령 혼자만 잘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

더구나 말로는 규제개혁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규제철폐가 되어버린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이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여성부 장관이 중학생 게임중독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목적이 송고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문체부 장관은 "목적이 송고해도 폐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라고 물어 부쳤다고 한다. 철폐 없는 막무내식 규제 철폐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을 지키기'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태에서 보듯이 본시 규제철폐는 대기업의

요구이고, 규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몫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를 모아 놓고 규제 철폐로 방향을 잡았다. 규제철폐만이 강조되면 재벌들을 위한 규제개혁이 아닌가 혹은 전면적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격이 지나친다. 자치단체장들이 주거환경·침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시지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전국 모든 자치 단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기초단체장의 규제권을 손본다는 것이다. 물론 최종 허가권은 갖고 있는 자자체 공무원들의 행태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출발 속고 없이 건들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도 무너뿐이라는 비판을 듣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규제개혁과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벌주겠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소개해서 기를 키워주는 방식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 서천군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희망택시'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택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그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택시가 노선 버스처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자체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법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혜롭게 우회해서 문제를 풀었다. 즉, 택시요금 지원을 택시 업자가 아닌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관련 정부 부처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규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게 하는 것이 곧 자자체의 발전이고 민주주의의 좋은 결과다.

이번 토론회가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일방적인 규제 '철폐'는 피하고 중앙정부가 자자체를 찍어 누르는 방식도 피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이 되라고 물어붙인다고 창조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더러 알아서 답을 내라고 하기 전에 풀 규제, 강화할 규제의 밑그림을 먼저 정확히 그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19704호 1부 500원

NGO 칼럼

부패 방지와 지방자치

김 기 희
광주경실련 시무처장

민선 6기 지방 선거가 9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5차례에 걸친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지방 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일부의 우려도 있으나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으나 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민주

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신뢰가 촉작되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 사회적 인식의 전환 이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부패에 대해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불감증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의 부패에 대해 으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선 5기까지 자자체 단체장 중 20%가 중도에 하차함으로써 수백억에 달하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자치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의 신고자 보호 조례 및 운영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도시 계획이나 포상제도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부패 유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

의회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내역 공개와 외유성 해외여행 예산 낭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청렴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체 예산으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도 도입하고자 했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방 공기업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임에도 지방자치법의 한계로 인해 실시하기 못한 사례다.

또 중앙 정부가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의 부패를 막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는 지방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현재의 우리 지방 자치 현실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미래의 비전보다 현실적인 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이 사라진 곳에

서는 현실적 이해를 실현하려는 욕망만이 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주민 참여와 의식 변화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전횡과 부패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민 스스로 부패한 공직자를 선택하고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이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지방 자치의 전전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참여를 통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선 6기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렴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의식 변화를 시민들 스스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제19704호 1부 500원

기고

더욱 강화되는 북한의 로켓

박 동 남
미래인보교육문제연구소장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무력시위가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2일과 23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을 또 무더기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4시부터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발을 발사했으며 23일 새벽에 16발을 추가 발사했다.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16일 프로그(Frog) 로켓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한지 6일 만에 다시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이유를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고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최근 들어 발사하는 미사일은 횃수와 종류가 매우 이례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2월 21일과 27일에는 2차례에 걸쳐 각각 'KN-09'로 불리는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씩을 발사했다. 3월 3일에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일 오후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주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통해서로 발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께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70발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을 무차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바로 미사일 성능실험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속전속결전략을 그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초기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화력으로 미국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로자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북한은 초전에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 수도권을 초토화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한국의 후방전력이나 미국의 개입을 막고자 한다. 이런 속전속결전략을 위해 북한은 무기체계의 기계화, 자주화,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군사전략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현재 한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SCUD-B와 SCUD-C 미사일을 약 1000km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탑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지속적인 실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을 개량시켜 좀 더 무거운 핵폭탄을 장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핵무기체계는 폭탄과 그 폭탄을 표적 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제조 했지만 무게 때문에 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거듭되는 핵 실험은 핵무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의 투사중량을 늘리며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실험이다. 미사일의 투사 중량을 늘리면 북한의 핵무기 체계

는 완성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 체계 완성과 속전속결전략의 일환으로 미사일 성능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WMEAT)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군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GDP 대비 17~23%에 해당하는 것으로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북한이 경제적 민관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를 늘리는 이유는 자멸이다.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기습적인 전면공격을 위해서다. 한미공조가 약화되고 민중봉기 등으로 사회혼란이 조성되면 그것을 빌미로 무력개입을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속전속결전략 강화와 핵무기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각종 미사일을 쏘아내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기간을 틀타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고 자위적 행동이라고 포장하기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마치 핵개발을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경우와 같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 한층 북한의 검은 속내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제19704호 1부 500원

유년시절을 보낸 산골마을은 삽진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어릴 적엔 마을 앞을 지나는 개울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무척 궁금했다. 나중에 커서야 마을 개울이 진안군 백운면 데미샵에서 발원한 삽진강과 합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삽진기는 34년간이나 유행돼온 '노후 장치물'인데도 사업자 측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항상 문제를 꿰웠다. 관계기관은 부실관리에 따른 사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엄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그레이드 내지 시설 폐쇄 등 근본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삽진기는 34년간이나 유행돼온 '노후 장치물'인데도 사업자 측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항상 문제를 꿰웠다. 관계기관은 부실관리에 따른 사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엄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그레이드 내지 시설 폐쇄 등 근본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9704호 1부 500원

유년시절을 보낸 산골마을은 삽진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어릴 적엔 마을 앞을 지나는 개울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무척 궁금했다. 나중에 커서야 마을 개울이 진안군 백운면 데미샵에서 발원한 삽진강과 합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삽진기는 34년간이나 유행돼온 '노후 장치물'인데도 사업자 측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항상 문제를 꿰웠다. 관계기관은 부실관리에 따른 사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엄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업그레이드 내지 시설 폐쇄 등 근본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9704호 1부 500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성과는 없고 과제만 쌓인 '광양만청 10년'

전남 동부권의 '경제 심장'으로 불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만청)이 개청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산업 단지 조성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유치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여기에다 광양컨테이너 부두로 접체 일로다.

특히 광양만청 내에 조성될 예정인 5개 지구 12개 산단 중 율촌1산단(조성률 93%)과 해룡산단(조성률 90%)은 물론 인천항에까지 뛰어올라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구조가 뛰어난 전남의 성장동력으로 광양만청은 전국으로 확장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광양만청은 물론 한

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경제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단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또한 이미 투자가 약정된 외국 자본 유입을 서둘러 광양만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개발에 힘써야 한다. 투자 유치 실적 또한 미미하다. 광양만청은 그동안 127억 14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실무자 규모는 쥐꼬리 수준이다. 전국 8개

자가 보호자에게 안고 태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이를 방관했고, 안전 바를 옮리고 내리는 것도 승객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또한 탑승자 주락 방지용으로 안전 바가 유일한 데다 체구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리프트가 제작된 것도 사고의 요인이다.

지산유원지 리프트카 사고는 지난 2008년 이후 6건이나 발생,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리프트 1기(36·여)씨가 주락해 부상을 입었다. 리프트 아래 5m 산자락에 주락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